

특검, 최순실 뇌물죄 적용 영장 검토

최씨 소환 불응시 새로운 혐의로 강제 구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개입 정황 포착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인명진이 당 떠나야" 새누리당 서정원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최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계 탈당을 요구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당을 떠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한 차례 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특검팀이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만큼, 새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로 뇌물죄 등이 거론된다.

특검팀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작성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의혹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관련자 조사 계획은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문건 작성 및 관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

련해 국정조사 등에서 위중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가 위증했는지 바로 드러난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위증이라면 특검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파악하고 있다"며 "주된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피해자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최순실·정유라, 학점 잘 받는법 상담"

최소 7명의 이화여대 교수·강사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소 7명의 이화여대 교수 및 강사를 만나 관련 과목 학점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대 특별감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씨 모녀가 류철균(필명 이인화)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포함해 총 7명의 이대 교수 및 강사를 만나 구체적으로 학사 상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 모녀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 교수 및 강사는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학장, 이원준 학과장, 이철균 교수, 이경옥 교수, 강지은 교수, 서호정 강사 등이다.

김경숙 전 학장은 2015년 9월 정유라 학사 관련 상담을 한 차례 했고, 지난해 4월에는 학장실에 이원준, 이경옥 교수를 불러 최씨 모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도록 했다.

이원준 학과장은 학과장으로 강지는 교수, 서호정 강사를 호출해 최씨 모녀에게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유라는 정유라를 만났다고 시인한 교수 및 강사 6명과 특검에서 밝힌 류철균 교수까지 총 7명의 이대 교수를 만나고 관련 과목의 학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왜 학점이 나왔는지 모른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씨와 정씨에게 과장으로부터 호출당한 교수와 강사가 직접 찾아와 학점 취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까지 해주는 상식을 벗어나는 교육농단이 일어났다"며 "교육농단을 벌인 정씨와 최씨, 이에 참여한 교수들의 범죄를 특검이 명확하게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30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국정원 짓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4일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에 대해 "공작정치"의 뒤에 이번에도 국정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두고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이 악의 트라이앵글을 이뤘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국정원이 진보단체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블랙리스트 근간이 됐다"며 "이는 재임 중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통계를 담은 국정원 보고서를 본 적 있다는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 증언과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대선 댓글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도 국정원이 비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공작정치의 뒤에 이번에도 국정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언제부터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 인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 선봉대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1만명에 가까운 숫자는 국정원의 '무명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최순실의 말을 박 대통령이 복창하고, 다시 최순실-박근혜의 연출에 맞춰 문체부와 국정원은 수족이 돼 각본을 썼다"고 개탄했다. /뉴스

민주당 의원 7명, 반년 만에 기세등등하게 방중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여권의 '매국행위' 공세 속에 눈치 보며 중국 일정 소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4일 중국 방문길에 나섰다. 반년 전 청와대와 여권의 '매국행위' 공세 속에 눈치를 보며 중국 일정을 소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에 따른 새누리당 분당으로 원내 제1당이 된 것을 지축하듯 기세등등하게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민주당 박정·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유은혜·정재호 의원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2박3일간 머물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

치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한한령(限韓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측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드 배치 문제 결정을 다음 대통령 당선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방중 첫날부터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한다. 중국 외교부 공식 초청 만찬에도 참석한다. 5일에는 사드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공산당 관계자 면담도 잡았다. 지난해 8월 당시 불발됐던 김정수 주중 한국대사의 면담도 이번에는 성사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방중계획에 대해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난 인사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다. 왕이 부장을 만나게 돼 있다. 이번은 오늘날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해 8월 당시 김영호·김병욱·소병훈·손혜원·신동근 등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판이하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 방중 의원들에게 "방중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민주당 당내 기류도 바뀌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현재는 당내에서 방중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 없다.

정부의 반응 역시 반년 전과는 달라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공식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우리 국회의원들의 방중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다. 지난해 8월 당시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부분열", "대안 없는 비판" 등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8월 중국에 다녀온 김병욱 의원은 뉴스스와의 통화에서 "8월 방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던 목적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번 방중 때는 종북몰이를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비판 내지 반대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